

“청춘은 오늘도 걱정이 많다”

강민지 수습기자 kmjee7074@naver.com

물가 상승,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번 겨울 가스요금과 난방비 폭탄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공업제품, 서비스, 전기·가스·수도, 농·축·수산물의 품목 성질별 지수 모두 전년 같은 달 대비 상승했다. 특히, 전기·가스·수도는 28.3% 올라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상승률이 급등한 배경은 난방비, 전기요금, 가스요금, 교통비 등의 공공요금 인상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가스공급량이 감소했고, 이에 따라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주택용 열 요금은 메가칼로리(Mcal)당 89.88원, 도시가스 요금은 19.69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7.8%, 38.4%

상승했다. 전기요금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교통비도 예외가 아니다. 2월 1일부터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 인상되어 4,800원이 되었다. 심야할증 시간에는 더 비싸다. 오후 10시에서 11시와 오전 2시에서 4시에는 5,800원,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6,700원의 기본요금이 적용된다. 기본요금 적용 거리도 2km에서 1.6km로 줄었다.

요금 인상은 계속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00~400원 가량 인상을 검토 중이다. 2023년 2월 15일, 서울시는 서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상반기 인상은 보류했지만, 행정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의 원인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공사는 경영악화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공식적 입장이다. 2월 24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해 32조 6,034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다고 발표했다. 2021년 5조 8,465억 원의 적자보다 26조 7,569억 원으로 5배가량 늘었다.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kWh당 19.3원 인상했고 올해 1월 13.1원을 추가로 인상했다. 그런데도 손실을 매우기 어려웠다. 국회에 제출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보면 올해 kWh당 51.6원은 올려야 적자 해소가 가능하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가스 판매 손실

금을 자산 중 하나인 ‘미수금’으로 분류하는 회계처리 방식을 사용한다. 가스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을 손실로 처리하지 않고 언젠가 들어올 돈인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지난해 가스요금 미수금은 8조 6,000억 원이다. 올해 3월 말이면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2조 4,634억 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다. 당연히 가격은 더 오를 것이다.

대중교통의 상황은 어떨까? 지난해 서울 지하철은 1조 2천억 원, 버스 6,6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청년들이 더 아프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경제고통지수¹⁾를 재구성하여 ‘세대별 체감 경제고통지수²⁾’를 산출했다. 2022년 기준 청년 체감 경제고통지수는 25.1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특히 청년층 지출 비중이 높은

교통, 음식·숙박, 식료품 등에 물가 상승이 집중되어 다른 연령대보다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소득이 적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은 더 힘들다.



권나현 학우(경기지도 22)

“물가 인상에 대한 청년층의 의견을 알아보고자 한국체육대학교 재학생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고양시에서 통학하는 권나현 학우(경기지도 22)는 “종종 이용하던 택시 요금도 확실히 체감하는데, 매일 사용하는 지하철까지 인상된다면 그것에 대한 체감은 훨씬 클 것 같다.”라며 “학생이라 적은 금액 변화에도 크게 와닿는다.”라고 덧붙였다.

변근영 학우(공연예술 20)는 “자취를 1학년 때부터 했는데 생활비가 당시의 2배 이상이다.”라며 물가 인상을 체감한다고 밝혔다. “원래 하루 종일 보일러를 켜고 살았다. 그런데 이제 자기 전에 보일러를 끄고 새벽에 취직하면 다시 켜다.”라며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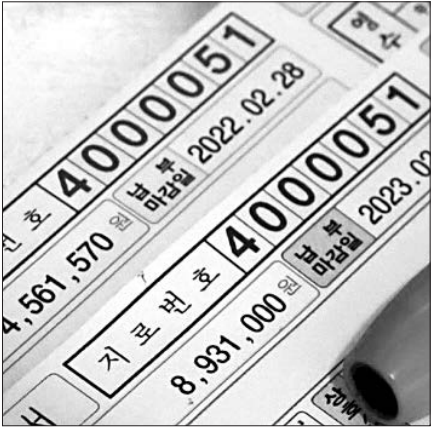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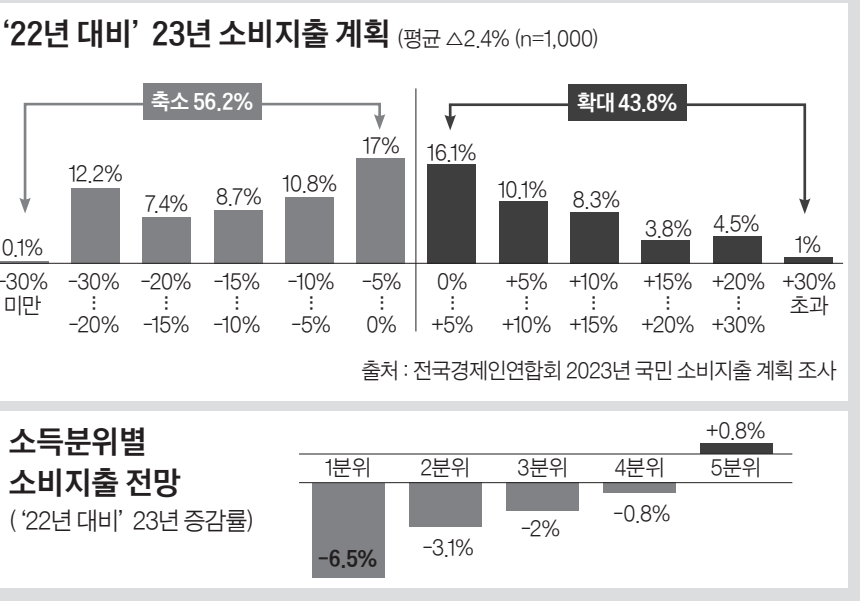
변근영 학우(공연예술 20)

성내동에서 자취하는 김준기 학우(운동건강관리 20)는 “물가 인상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지난 달 대비 2배 가까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임금을 올려준다거나 학생들에게 필요한 혜택을 많이 제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들이 많이 접할 수 있게 SNS 등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김준기 학우(운동건강관리 20)

- 1) 경제고통지수 :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Arthur Okun)이 국민의 경제적 삶의 질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한 지수로,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하여 산출
- 2)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 연령대별 체감물가상승률(연령대별 소비지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서울 성북구의 한 대중목욕탕 업주가 14일 오후 1월과 지난해 1월에 발부된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456만1570원이던 한 달 가스요금은 올해 893만1000원으로 두 배 가까이 치솟았다.

출처 : 연합뉴스

아는 만큼 받는 혜택 : 보조금 24 활용하기

정부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데도 지원 방법, 절차 등 정보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2022년 취약계층 41만 2천여 가구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보지 못했다. 만약 이들이 ‘보조금 24’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다.

보조금 24란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일이 정보를 검색하고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나이와 관계없이 청년, 노년 모두 필요한 지원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3월 3일 기준 보조금 24에 등록된 보조금은 총 9,771개이며 그 중 중앙부처 438개, 자치단체 4,664개, 공공기관과 교육청 928개의 맞춤형 안내 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24 홈페이지(앱)에서 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는 2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해 2023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약 8,900억 원을 투입해 54개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3년 다양한 청년정책을 제공하고자 노력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에게 필요한 정책을 찾는 것이다. 보조금 24를 적극 활용해보자.

2023년 정책 알아보기 : 교통비 편

1) 알뜰교통카드

알뜰교통카드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때, 반대로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까지 이동할 때, 그 이동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해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길이가 길수록 더 많은 마일리지를 받는다. 카드사의 할인 혜택까지 더하면 대중교통비의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정책, 제도, 민간기업과 연계하여 추가 혜택도 제공한다.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과 연계하여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에는 마일리지가 2배 적립된다. 단,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최대 적립 횟수는 44회다.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청년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0회로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통요금 지출액	마일리지 지급액	청년층 마일리지 상향지원
2천원 미만	최대 250원	350원
2천원 이상 3천원 미만	최대 350원	500원
3천원 이상	최대 450원	650원

교통요금 지출액 별 마일리지 지급액

2023년 정책 알아보기 : 주거비 편

1) 청년월세특별지원

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 월세를 지원한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였던 2022년부터 시행되어 2023년 8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 첫째, 거주요건으로서 월세 6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 단,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면 지원할 수 있다. 둘째, 소득과 재산 요건이다. 청년 가구와 원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총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2) 난방비 관련 정책

2월 1일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난방비 절감 제도와 추가 난방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기에 사전에 지원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추가 난방비 지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대

책이다.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겨울철 난방 지원 최대 금액인 59.2만 원을 지원한다. 겨울철 4개월간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난방비 절감 제도로서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면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층은 6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2017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109만 대 교체를 지원했다. 올해는 총 5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최대 52만 대 교체를 지원할 예정이다. 친환경 보일러는 연간 난방비를 최대 44만 원 절약할 수 있어 소비자도 장기적으로 이익이다. ‘가정용 보일러인증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군·구 환경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자생각

요금 인상, 적절한 대책인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안정화, 대중교통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을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이다. 한국가스공사는 독특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주주인 정부와 한국전력은 수백억 원대의 배당금을 받기 위해 검토 중이다. 국민만 고통스럽다. 계속된 적자에도 정부는 가계 부담 완화를 이유로 요금을 묶어두지만 했고, 상황이 악화하자 급격하게 요금을 인상했다. 대비할 시

간이 없다. 단계적인 요금 인상이 있었다면 국민의 부담은 덜 했을 것이다.

대중교통도 마찬가지다. 요금 인상을 추진한 계기는 무임승차 노인인구의 증가로 발생한 손실을 메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인 무임승차 제도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운임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제도는 1984년 시작되었으나 당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4.1%다. 그러나 2023년 노인인구 비율은 18.4%다. 무임승차가 가능한 노인인

구 비율을 줄여야 한다. 무임승차 기준 나이를 증가시키거나 무임승차가 가능한 시간대와 횟수 제한, 일정 소득 이하의 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노인 무임승차제가 법령에 근거한 제도인 만큼 국가가 그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최소한 제도로 인한 적자는 국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대중교통과 난방은 일상생활에 있어 꼭 필요하기에 고정적으로 지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약이다. 2023년에는 강화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가져 보는 것은 어떨까?